의안번호	2214768
의 뢰 인	권향엽의원
회 답 일	2025.11.27.
추계번호	25D60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헌법교육을 실시할 경우, 콘텐츠 개발비 등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0억원(연평균 2억원)으로 추계됨

[표 1]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헌법교육 실시 (안 제38조 제1항)	200	200	200	200	200	1,000	2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8조 제1항 (헌법교육·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신설	국방부장관은 헌법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제1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8조 제1항 (헌법교육·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신설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경우, 교재 제작 등을 위해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

○ 국방부는 법률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경우, 일반 군인에게는 원격영상교육을, 집체교육이 필요할 경우 군 법무관이 직접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함

○ 이에 따라 추계에서는 원격영상교육 제작 및 교재 제작 등 국방관계 법령교육 관련 콘텐츠 제작 비용을 추계하고, 강사료 등은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추계에서는 국방부의 다른 법정의무교육 실시 시 소요된 비용을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헌법교육 실시

❑ 법정의무교육인 성인지교육, 인권교육, 자살예방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등 법정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4개 법정교육예산 평균은 1억 9,500만원임

○ 성인지교육의 경우, 강사료, 직무역량 강화교육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포함할 경우, 19억 4,200만원이며, 이 중 콘텐츠개발 관련 예산은 3억 4,500만원임

○ 인권교육의 경우 군인권자문위원회 운영, 인권교관 심화교육, 찾아가는 인권교육 등을 포함할 경우 10억 1,000만원이며, 이 중 콘텐츠개발 관련 예산은 9,600만원임

[표 2] 법정교육 예산 현황(2025)

(단위: 백만원)

	성인지교육	인권교육	자살예방교육	다문화이해교육	평균
예산	345	96	296	41.6	195

주: 성인지교육의 경우, 강사료, 직무역량 강화교육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포함할 경우, 19억 4,200만원이며, 인권교육의 경우 군인권자문위원회 운영, 인권교관 심화교육, 찾아가는 인권교육 등을 포함할 경우 10억 1,000만원이나, 여기서는 콘텐츠개발 관련 예산만 포함하였음

자료: 국방부

❑ 국방부는 헌법교육과 관련하여 매년 교재제작에 1억원, 교육영상제작에 1억원 등 매년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 성인지교육 및 인권교육 등 다른 의무교육 예산을 고려할 때, 헌법교육에 따른 교재제작 및 교육영상제작 등 콘텐츠 개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표 3] 헌법교육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교재제작	100	100	100	100	100	500
교육영상제작	100	100	100	100	100	500
합계	200	200	200	200	200	1,000

나.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헌법교육을 실시할 경우, 콘텐츠 개발비 등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0억원으로 추계됨

[표 4] 헌법교육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헌법교육 실시 (안 제38조 제1항)	200	200	200	200	200	1,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헌법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성인지교육, 인권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의 콘텐츠 개발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집체교육 실시 여부 등 교육 방법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